

2026. 7. 24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7월 23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

균형발전정책과장

김윤하

02-2133-8608

균형발전계획팀장

권우철

02-2133-8624

사진 없음 ☐ 사진 있음 ☒
※ 추후제공

쪽수: 8쪽

관련 누리집

<https://uri.seoul.go.kr/>

서울시, '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 위한 예타 제도 개선 토론회' 개최

- 7.22.(수)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대응 위한 대토론회 개최... 시민학계 등 100여 명 참석
- 전문가들 “정부 개선안, 수도권 현실 충분히 반영해야... 실효성 높일 추가 개선 필요”
- 정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추진... 경제성 평가 완화 신규 편익 발굴 등 중점
- 市 “예타 제도, 공공투자 가치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 되도록 지속 논의할 것”

□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에 대해 수도권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. 서울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체계 개선과 신규 편익 반영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.

□ 서울시는 7월 22일(수) 14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「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((사)한국정책 분석평가학회 주관)」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토론회에는 도시계획·교통·경제성 분석 분야의 학계 및 전문가, 시민

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,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.

<전문가들 “정부 개정안, 수도권 현실 충분히 반영해야… 실효성 높일 추가 개선 필요”>

□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탁현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‘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분석’을 주제로, 지난 5월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 내용과 향후 영향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.

○ 앞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제성 가중치 5% 하향, 수도권 균형성장 가중치 5% 신설 등 일부 평가 항목과 분석 기준을 개선했다.

□ 탁 교수는 정부의 이번 개편 내용을 예타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면서도, 이번 개정만으로는 수도권에 직면한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

○ 개편안에서도 수도권은 여전히 경제성(B/C)에 최대 70%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, 교통소외지역의 경전철 사업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.

□ 두 번째 발제자인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는 ‘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한계 및 개선 방향’을 주제로 발표하며, “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‘경제성’ 중심 평가에서 ‘공공가치 종합평가’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수적”이라고 밝혔다.

○ 특히 예타 제도가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성 항목의 가중치와 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.

□ 이어 “예타 평가 구조가 수도권, 비수도권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수도권을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으로 전제한 현 체계에서는 수도권 내부의 인프라 취약 지역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”면서 “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 역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□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, 전문가 패널 등 8명의 전문가들이 향후 예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.

○ 토론의 좌장은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으며, 김동성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박사, 서대현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박사, 이호영 경기 공공투자관리센터 박사, 안광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장, 김윤하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 등이 함께했다.

□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“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균형성장 평가 비중은 낮아 수도권 내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기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”며 “수도권 내 격차·혼잡·미래 수요를 반영하는 평가 체계와 정책성·지역균형 항목의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”고 입을 모았다.

○ 대표적으로 저출생·고령화, 탄소중립, 디지털 전환 등 국가적 과제는 단순히 비용 대비 편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, 사회적 편익과 도시회복력, 안전성, 환경성 등을 폭넓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.

<정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추진… 경제성 평가 완화신규 편익 발굴 등 중점>

□ 서울시는 이번 대토론회 결과와 학술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

건의(안)을 구체화해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추진할 방침이다.

- 건의안에는 ▲경제성 평가 가중치 완화 ▲기존 편익 재평가 및 신규 편익 발굴 ▲교통체계 효율성 개선 효과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.
- 시는 '24년 7월 정부에 예타제도 개선을 건의한 데 이어 '25년 12월 학계·연구기관·시민 등과 함께 ‘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’를 개최하는 등 수도권 현실에 맞는 예타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.

□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“급변하는 도시환경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”면서 “예타 제도가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는 물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1. 토론회 개요

붙임 2. 토론회 포스터

붙임 3. 제도 개선 건의안

붙임 4. 토론회 현장 사진. 끝.

□ 행사개요

- 일시/장소 : '26. 7. 22.(수) 14:00~15:50 / 서울시립미술관 세미나홀(B1)
- 주최/주관 : 서울특별시 / (사)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
- 참석 : 80여 명(전문가, 연구기관, 공무원, 시민 등)
- 발제내용
 - (발제1) 2026년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분석
 - (발제2) 예비타당성 제도 한계 및 개선방향

□ 프로그램

- 주요내용 : 발제는 각 20분 씩, 토론은 50분 진행 (패널 8인, 좌장포함)

일 정		내 용	비 고
14:00~14:02	2'	개회 및 내빈소개	개회
14:02~14:10	8'	개회사, 축사 - 서울시 균형발전본부,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	
14:10~14:30	20'	[발제1] 2026년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분석 (한국교통대학교 탁현우 교수)	
14:30~14:50	20'	[발제2] 예비타당성 제도 한계 및 개선 방향 (서울대학교 고길곤 교수)	
14:50~15:40	50'	[토론] 수도권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방향 ▶ 좌장 : 서울시립대 박현 교수 ▶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동성 박사 ▶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 김윤하 과장 ▶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서대현 박사 ▶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안광열 과장 ▶ 경기 공공투자관리센터 이호영 박사	
15:40~15:50	10'	질의응답 및 마무리	폐회

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

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토론회

2026. 7. 22. (수)

14:00 ~ 15:50

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(B1)



행사정보 바로가기

개회 및 내빈 소개

14:00~14:02

진행자 ▶ 라용란 아나운서

인사말씀, 사진촬영

14:02~14:10

서울시 균형발전본부 /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

주제 발표 I

14:10~14:30



2026년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분석

발표자 ▶ 탁현우 교수(한국교통대학교)

주제 발표 II

14:30~14:50



예비타당성 제도 한계 및 개선 방향

발표자 ▶ 고길곤 교수(서울대학교)

토론

14:50~15:40



좌 장 ▶ 박 현 교수(서울시립대학교)

토론자 ▶ 김동성 연구위원(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)

김윤하 과장(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)

서대현 연구위원(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)

안광열 과장(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)

이호영 연구위원(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)

질의응답 및 폐회

15:40~15:5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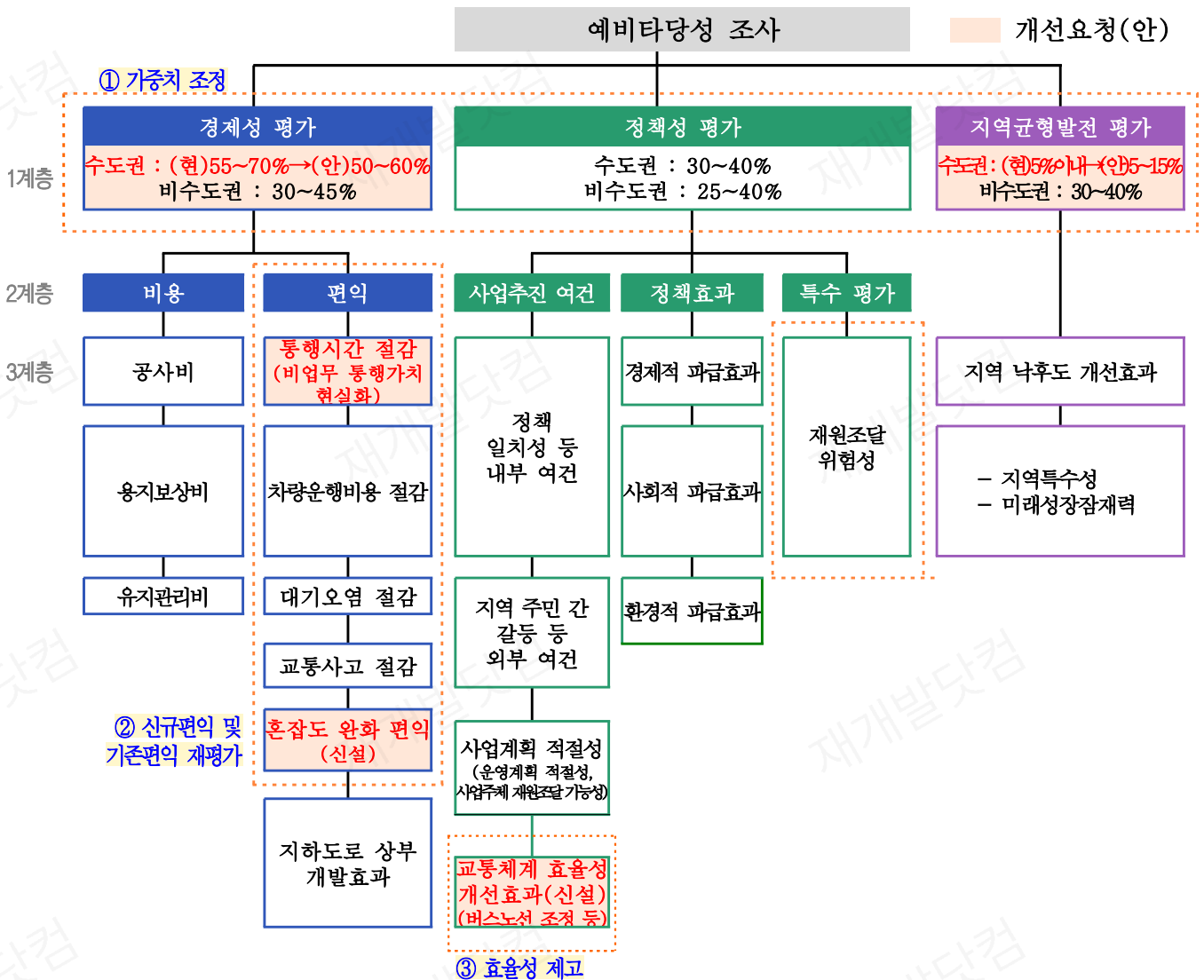
붙임 3

제도 개선 건의안

26.5. 개편	
• 가중치	경제성 55~70% 균형발전 5% 이내
• 경제성 평가 세부편익	통행시간 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대기오염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지하도로 상부 개발효과
• 정책성 평가	사업계획 적절성 등 (운영계획, 재원조달 등)



추가 개선요청(안)	
① 가중치 조정	경제성 50~60%(10%p ↓) 균형발전 5~15%(10%p ↑)
② 기존편익 재평가	통행시간 절감 편익 재평가 (비업무(여) 통행가치 현실화)
② 신규편익 발굴	혼잡도 완화 편익 반영
③ 사업추진 여건	교통체계 효율성 개선효과 (버스노선 조정 등)



붙임 4**토론회 현장 사진**

토론회 시작 모습	토론 진행 모습
참석관계자 기념촬영	